

주간변혁산별

제20호

■2008.8.25(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생산성 향상의 노예를 거부하라

주간2교대 현대차지부 의견일치안 ... M/H 현장권력 반납 · 노동자 기계부품화
10+10 물량 유지 ... 단협 개악 · 노동강도강화 · 배치전환 필연적으로 이어져

지난 8월 18일 현대자동차지부가 회사와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 의견일치안은 현장권력을 빼앗기고 주도권을 회사에 넘긴 관료주의적 현장통제 내용이다. 주간연속2교대 의견일치안은 노동시간을 주간1조 8시간, 야간2조 8시간에 잔업1시간(일명 8/8+1)으로 변경하면서 현행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 동안 생산하는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동강도 강화 위해 단협 개악

현행대로 하면 주8/야9 노동시간일 때 생산대수는 152.5만대, 주8/야8은 144.3만대가 된다. 2007년 174.4만대 기준(10/10)으로 주8/야8시간이면 물량은 30만대, 주8/야9시간이면 21.85만대가 부족하다. 절대적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회사가 이것을 메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해왔던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것이다. 유급으로 보장됐던 다음과 같은 시간이 폐지될 수 있다. 노동안전교육시간, 휴게시간, 식목일, 제현절, 조희시간, 중복휴일, 명절 때 야간조 유급휴가 등. 현대자동차 1공장 이진운 대의원은 이런 단협 개악이 이뤄졌을 때 총



238.8시간이 사라진다고 계산했다.

두 번째는 노동강도 강화 즉,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리고(UPH업), 라인에 투입되는 인원수(M/H)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리는 것은 현장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거의 몇 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진운 대의원에 따르면, 현행보다 시간당 생산대수가 약 19%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생산대수는 오히려 늘리면서 인원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현장은 그동안 노동강도강화에 맞서 현장과업(M/H과업) 즉, '골병'이라 불렀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투입인원

축소 반대와 일방적 배치전환 반대 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의견일치 안에는 “회사와 조합은 근무형태변경추진위내에 ‘M/H개선회원회’를 구성하여 M/H 산정 기준 및 적정인원 산정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상기 1항의 생산량 확보와 향후 신차투입 및 생산라인 변동 시에도 생산량 지속 유지를 위한 물량 조정시 그리고 그에 따른 인원 배치시 적용한다”라고 돼 있다.

게다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에서 합의한 내용이 단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돼 있다. 추진위는 현장주도가 아니라 소수 집행부 주도이며, 나아가 회사

의 압력이 쉽게 들어오는 구조이다. M/H투쟁의 주도권을 현장에서 빼앗아 집행부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회사의 물량과 생산성향상의 노예가 되도록 현장권력을 회사에 갖다 바치자는 것이다.

임금, 부품사, 비정규직 다 문제

핵심적 요구 중 하나인 월급제 시행도 총액임금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정급을 확대하고 변동 임금 성격인 잔업, 특근 등을 줄이려는 시도를 저버리고 있다. 교대제 시행시기와 월급제 시행시기도 모두 2009년 10월로 미뤄졌다. M/H투쟁을 거세할 내용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사이 현장권력이 약화되면 회사가 더 수월하게 물량에 조정되는 변동임금제(=능률급) 등을 밀어부칠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이 기형적 주간연속2교대가 미칠 부품사 노동자들 문제는 ‘방안 마련’으로 형식적으로 치부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의견일치서 어느 한 문구조차 들어있지 않다.

3무(無)(노동강도강화, 임금저하, 고용불안) 원칙과 현장권력을 거세하고 회사 논리를 받아들이는 ‘노동자의 기계부품화’는 완전 폐기돼야 마땅하다.

뒤통수 맞은 기아 · 부품사 노동자

[주간2교대] 기아차 4시간 일해도 10시간 ‘생활임금’ 보장 노사협의 무력화

카니발을 만드는 기아자동차 1공장은 8월 넷째주 일주일동안 단 12시간만 일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루 4시간 일했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아예 근무가 없었다. 25일부터는 하루 5시간씩 25시간 일한다는 오더가 내려와있는 상태다. 화성공장 모하비라인도 10시간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잔업 2시간을 포함해 하루 10시간 근무한 임금을 지급했다. 지난 해 화성공장이 물량이 없어 하루 4시간 가량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 당시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생활임금 보장하라”며 싸우기도 했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회사는 통상적인 근무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생산직, 기술직의 경우 잔업 2시간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작업물량 부족 등 통상적인 근무형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합의를 근거로 노사는 공장별 협의를 해왔고, 소하리 1공장의 경우 2007년 1월 휴무협의를 하면서 12월까지 잔업 2시간을 보장한다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해 이같이 ‘생활임금’을 보장받아왔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존이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들의 책임이며, 노동자들은 반드시 생활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던 잔업을 포함해 10시간의 임금을 보장받았던 것은 바로 잔업이 생존임금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8+9안 중에서 주야 잔업 4시간 중 3시간만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아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에 뒤통수를 때리는 안이다.

기아자동차지부 한 실장은 “이런 황당한 안을 어떻게 민주노조 집행부가 받을 수 있느냐?”며 분개해했다. 기아차 사용자들도 현대차와 동일한 안을 곧 던질 것으로 보여 기아노동자들의 투쟁이 험겨울 수밖에 없다.

뒤통수를 맞기는 지역지부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부품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용자들과 집단교섭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완강하게 주장해왔던 대전충북지부는 현대차지부의 의견일치 소식이 전해진 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지부는 “관계사용자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호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완성차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시기, 시행방법, 인력운영 방안, 임금보전방안, 생산량 향상 방안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수준으로 합의하고 말았다.

주간2교대제는 산업 전반에 걸친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단축 투쟁이다. 15만 금속노조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투쟁이 결국 현대차지부 내로 갇혀버렸고,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강화, 임금저하, 고용불안’ 없는 ‘3무 원칙’이 폐기되고 말았다. 합의안을 폐기하고 전면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36만원 임금삭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는 불보듯 ... 비정규직 동일적용과 정규직화 명문화해야

현대차 주간2교대제 의견접근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다. 우리는 지난 <변혁산별>19호에서 '주간2교대'의 핵심 5대 원칙은 ▲야간노동완전철폐 ▲생활임금보장 ▲노동강도강화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청노동자 동일적용을 제시했다. 현대차지부가 애기한 '3무원칙'에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칙이 추가된 것이다.

노사간 의견접근된 8+9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시킨 내용을 담은 "근무형태 주간8, 야간9 변경시 비정규직 임금저하 예상 비교표"라는 글이 8월 20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시급이 4,300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잔업시간이 82.25시간이 줄어들어 월 361,9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했다. 또 올해 정규직과 동일한 82,000원 인상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 월 390,687원의 임금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중심 비정규 정규직화 어디로

현대차 노사의 의견접근안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다. 현대차지부가 구성하겠다고 한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선위원회'에도 부품사는 포함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은 없다.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1만여명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합의하면서 비정규직의 요구를 완전히 배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1	업무 형태 변경시 A조임금 비교 08년 6월을 대상으로 했음														
2		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3	기존		8 2.75	8 2.75	8	8 2.75	8 2.75	8							
4	2교대시		8	8	8	8	8	8							
5		3	9	10	11	12	13	14							
6	기존		8 6.50	8 6.50	8 6.50	8 6.50	8 6.50	8							
7	2교대시		8 3	8 3	8 3	8 3	8 3	8 3							
8		15	16	17	18	19	20	21							
9	기존		8 2.75	8 2.75	8	8 2.75	8 2.75	8							
10	2교대시		8	8	8	8	8	8							
11		22	23	24	25	26	28	29							
12	기존		8 6.50	8 6.50	8 6.50	8 6.50	8 6.50	8							
13	2교대시		8 3	8 3	8 3	8 3	8 3	8 3							
14		30	31												
15			8 2.75												
16			8												
17	* 야간 22~06시부터 50%가산수당 8시간 이후 부터 50%가산수당으로 대략 2.75씩 잡아 야간시간산출했음														
18	실지로 는 야간 수당이 더 작을것으로 생각됨														
19															
20		정회시간	주차시간	연장시간											
21	기존	200	40	89.75											
22	2교대시	200	40	30											
23				59.75											
24	시급이 4300원인 경우 2시급이면 대략잡아 100원정도 더한다면 4400+59.75=262900원 주네														
25															
26	상기 계산은 파업으로 일찍마치고 와서 단순 계산 해본거임 연장시간(3)시간은 정확치 않음														
27	정확한 사실은 못대다는거 하나 정확함														
28															

한 합의라는 비난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10+10 근무가 8+9로 3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의 생산량을 맞추려면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견접근안'에는 생산시설 신·증설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

노동강도 강화는 불보듯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다. 노사는 'M/H 개선위원회'에서 생산량확보, 물량조정, 인원배치 등 노동강도에 관한 단협에 준하는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정규직이 기피하는 가장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장중심 없이 똑같은 물량을 뽑아내기 위해 'M/H개선위원회'가 노동강도를 얼마나 강화할지는 너무

나 뻔한 일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자유로운 배치전환을 통한 '지옥의 노동'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처절하게 닦쳐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월 36만원의 임금을 보존받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말상시야간까지도 자청할 수밖에 없는 생존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체 4만4천명의 조합원이 대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5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2교대제를 쟁취해야 한다. 아니, 부품사를 포함해 15만 금속노조 조합원, 나아가 150만 금속산업노동자들을 고려한 주간2교대제를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지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함께 싸워서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져야 한다.

“도적떼도 대장 잡혀가면 관아 쳐들어갔는데”

총파업투쟁으로 금속노조 위원장 석방 ... 27일 총파업 반드시 사수해야

“하다못해 옛날 도적떼도 대장이 잡혀가면 관아를 쳐들어가 불을 질렀는데, 이게 뭐하는 건지...”

금속노조 쟁대위에서 22일 ‘위원장 체포에 항의하는 4시간 파업’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금속노조 지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20일 오전 11시 30분 경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로 이동 중 서울시경 소속의 기동대 차량에 의해 연행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 광우병쇠고기 수입 저지, 공기업 사유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벌인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2시 비상상무 집행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4일 3차 중앙쟁대위에서 ‘위원장 연행시 전 조합원 총파업’을 결의한 대로 22일 오후 4시간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21일 비상중앙쟁대위에 안전으로 상정했다. 이미 쟁대위에서 세 차례나 결의된 파업이기 때문에 실행만 하면 되는 문제였다.

기아·현대 ‘총파업 준비 인됐다’

그러나 21일 오전에 열린 10차 중앙쟁대위에서 기아와 현대자동차지부는 “총파업을 하기 위한 현장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끝까지 총파업을 반대했다. 기아와 현대는 지부 임단협 투쟁이 끝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부집단교섭과 지회교섭이 대부분 타결된 지역지부와는 달리 합법파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한 ‘위원장 연행시 전 조합원 총파업’을 하지 않았다.

이날 쟁대위는 22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 후 지역 경찰청 항의방문과 27일 전 조합원 2시간 총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오후 2시 위원장이 수감되어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위원장 강제연행 공안탄압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역에서 올라온 간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수십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해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했고, 노조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은 ‘미친 소’와 ‘미친 정책’으로부터 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총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내린 이명박이 불법이고, 감옥에 갇혀야 할 사람은 정갑득 위원장이 아니라 이명박과 어청수 경찰청장이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기는커녕, 형식적인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간부들을 이동시켜 집회에 참가한 간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27일 총파업 반드시 사수해야

법적으로 따지면 금속노조의 ‘촛불총파업’은 임단협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이었다. 5월 말부터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던 촛불항쟁, 6.10 100만 촛불시위 등 5~6월 촛불항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외면하고 불법파업을 피하기 위한 ‘꼼수’ 파업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금속노조의 미약한 저항조차 강력한 탄압으로 짓밟고 있다. 금속노조 임원과 현대, 기아 등 20여명 체포영장 발부, 20여명 3차 출두 요구서 발부 등 금속노조만 70여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역대 독재정권에서 보았듯이 탄압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저항뿐이다. 정갑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15만 전 조합원에 대한 구속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켜내야 한다.

이명박 노사화합모델 박살낸다

GM대우 19~22일 총 20시간 파업 정리해고 원상회복 요구 ... 공장담 넘어야 더 큰 승리

2008년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전날 이석행 위원장의 경찰 출두를 문제삼아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전격 취소한 후 갑작스럽게 GM대우 부평공장을 방문했다. 이명박이 GM대우 작업복을 입고 그리말디 사장과 이남목 지부장과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방송과 신문을 일제히 장식했다. 이명박은 “5년째 파업 안하고 있죠. 앞으로도 파업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M대우 노동자들이 이명박의 ‘노사화합모델’과 ‘무파업’을 통쾌하게 박살냈다. GM대우차지부는 지난 19일 주야4시간, 20일 주야 6시간, 21일 주야 4시간, 22일 주야 6시간 등 총 20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도 주야 3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12일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1991년 이후 최대인 4천여명이 부평공장을 가득 메웠다. 지부는 22일과 25일 주야 6시간 파업을 예정했으나, 회사가 수정안 제시를 약속해 파업이 취소됐고, 25일 오후 2시 교섭이 열린다.

정리해고 원상회복과 임금의 핵심

노사간의 핵심쟁점은 4가지 정도다.

첫째, 정리해고자 원상회복이다. 2001년 대우자동차 부도로 해고됐다가 복직된 1700여명의 조합원들이 당시 휴업 등으로 인해 적게 받았던 퇴직금 차액에 대한 보상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1인당 평균 800여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정리해고자 원상회복은 액수를 넘어 GM대우차 자본에게 “너희는 정리해고 하지 마라”는 강

력한 압박 수단이며, 정리해고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인 요구다.

둘째, 창원공장 해고자 복직이다. 지난 2005년 창원지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투쟁을 벌이다 구속됐고,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3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 역시 정치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셋째, 신입사원 연월차다. 기존 조합원들과는 달리 신입사원들은 계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가 1년 후 15개이며, 2년에 1개씩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기존 조합원과 형평성 요구다.

넷째, 임금과 성과급이다. 회사는 호봉승급 포함 65000원에 200%, 180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휴업을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도 기본급만 62,000원이 인상됐다. 현대차 제시안 82,000원과 300%+ 200만원(800만원) 등 동종업종의 격차로 조합원들의 분노가 크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은 전 세계 GM대우차 공장 중에서 상하이공장과 함께 유일한 흑자공장의 성과를 GM자본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다.

공장 담벼락 넘지 못하는 투쟁

2008년 GM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2001년 부도 이후 자본의 일방적이며 압도적인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GM자본



과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GM대우차지부는 이러한 자랑스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지부 홈페이지에는 지부 소식지인 <민주광장>도 올리지 않고 있으며, 파업 소식도 알리지 않고 있다. 일부 활동가들이 “2001년 정리해고 때 전국 노동자들의 연대를 갚기 위해 파업 후 기륭투쟁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21일 기륭집회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파업은 공장 안에서 한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GM대우차 한 간부는 “자본과 지부 모두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조합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GM대우 조합원들이 2001년 부도의 아픈 기억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노동자의 투쟁정신을 회복하는 것과 기륭투쟁에 대한 연대, 촛불투쟁에 대한 연대 등 공장의 담장을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과 연대하는 것이다.

임금과 성과급도 더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국제적 연대

국제금속노련 4대 비정규직 대응방침 ... 10월 초 국제공동행동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이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국제금속노련(IMF)은 2007년 11월 28~29일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조직적 방침'을 채택하였다. 조직적 규율이 느슨한 국제연대조직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조직적 방침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에서 벗어나 있는 유럽에서도 차별은 거의 없다고 하나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조의 힘이 약한 아시아권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사용되고 있고,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경쟁력 강화란 명목하에 전 세계적으로 자본은 자유로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법,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악해 가고 있는데 반해 노동운동은 이를 막아내지도 못하고 주체적인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공동대응

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국제금속노련(IMF)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 제도개선 투쟁에 대해 공동의 요구와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며, 내부 활동에 있어서도 통일적 방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 투쟁해 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법, 제도개선이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중, 장기적 과제라는 조건을 감안하여 당장은 노동조합들의 주체적 활동과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한 것은 마치 비정규직 사업과 활동이 부족한 한국의 노동운동에게 가하는 일침일 수 있다.

우리의 과제 = 국제금속 대응방침

국제금속노련(IMF)이 채택한 4가지 원칙은 1)불안정 노동의 대량 양산을 막아야 한다 2)불안정한 고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3) 불안정 노동이 존재하는 경우, 임금 및 노동조건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해야 한다 4)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간접 고용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과제와 동일하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별노조 구축이 필수적이다'는 전제하에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과의 연대강화 ▲차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행동 ▲비정규직 가입 제한하는 규약개정 및 조직화 대안수립 ▲단협적용 확대 및 비정규직 적용 단협요

구 ▲단계적인 정규직화 운동의 전개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고수 등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법, 제도개선 투쟁 관련해서도 ▲극극적인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걸림돌 제거 ▲사내하청, 파견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위장도급에 대한 ILO권고비준 ▲임시직 사용조건 제한 등을 공동의 목표로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금속노련은 올해부터 9월말~10월초 일주일간을 국제공동행동 주간으로 정해 전 세계적인 공동행동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방침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의 노동운동은 하나

물론, 국제금속노련의 대응방침이 강제성을 갖기는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본이 세계화된 상황에서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본의 법 개악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법 개악은 동남아 및 아시아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산별노조운동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법, 제도개선 투쟁을 승리해 나간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침은 물론 세계적인 연대전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말은 무성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산별노조 발전과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 과제임과 동시에 결코 무너져서는 안되는 전 국제연대전선의 중심축으로 더욱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깨려는 자본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판결 그 이후 ... 노동운동의 적극적 대응 절실

지난 7. 10.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에서 선박의 수리, 검사업무를 하던 노동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미포조선이 하청업체인 용인기업(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과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을 위장한 것(위장도급계약)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은 원청회사인 현대미포조선에 처음부터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03. 1. 31자로 하청업체 폐업으로 해고가 되어 거리로 나선지 꼭 5년 6개월만이다. 30여명의 노동자들 중 2명은 이미 정년이 넘기도 하였다.

법원에서는 위장도급인 경우에 그 실제 관계는 파견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예 직접고용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좀 심한 경우여서 하청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할 정도인 경우, 채용이나 임금지급, 징계 등에 관여하는 경우는 직접고용관계로 인정하고 그보다 덜한 경우에는 파견관계로 인정한다고 보면 된다. 파견관계인데 도급으로 위장하고 있다면 역시 불법파견이 될 것이다.

애초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사건은 노동부에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뒤집어서 도급으로 인정하였고 울산지법과 부산고등법원도 이를 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현대미포조선과 용인기업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것은 도급계약을 위

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현대미포조선과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한 것이다.

21세기 노예제 파견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지금 간접고용은 대부분 도급계약으로 위장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고용관계를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사용자 책임을 잠탈하는 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은 없어져야 하고 실제 고용주인 원청 사업주가 온전히 사용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합법화 해 놓은 21세기 노예제도라 불리는 파견은 그래서 철폐되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래 소사장 제도나, 모자회사 관계 등 원청이 하청에 대하여 경영적 지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청회사와의 노동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하던 것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하청 사이에 경영적 지배 관계가 없더라도 파견관계를 넘어 직접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대미포조선 사건은 주요 사례로서 학계나 실무계에서 논쟁이 되었던 사안으로 3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 끝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후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단순한 인력파견에 불과한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형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원청회사와의 직접고용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심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판결이 내려진다. 그런데 회사측은 이미 김앤장과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법무법인 2곳이 선임되어 있는데도 이에 더하여 추가로 법무법인(로펌)을 선임하고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끌 태세다.

대법원 판결을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떡해서든지 하청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5년 6개월동안 이미 2명이 정년을 맞이하였고 여기서 또 시간이 지체된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년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과 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권두실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세계경제위기 새로운 제국의 충돌

그루지야 전쟁, 지역강대국 전략한 러시아-쇠퇴한 최강대국 미국의 대리전쟁



지난 8월 8일 그루지야가 분리독립 요구를 하던 남오세티야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그루지야에 군사공격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요격미사일 10기를 폴란드에 배치하는 미사일방어(MD)기지 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결국 8월 22일 러시아 군대가 그루지야에서 철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언론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루지야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의 '신냉전'이 시작된 것 같다.

구 소련 시절 CIS(독립국가연합)였던 그루지야는 러시아로부터 분리독립하기 위해 미국에 기대고 있고 그루지야 내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야는 분리독립하기 위해 러시아에 기대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러시아의 반대를 무시하고 그루지야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그루지야는 자치구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

야 자치공화국이 분리독립 요구를 군사적 위협으로 막자 러시아는 그루지야의 무인정찰기를 격추해버렸다.

러시아, 지역강대국으로 전략

그러나 1990년대 초 러시아는 동유럽에 있던 러시아 제국의 몰락, 인접한 옛 소련 공화국들의 독립 경제의 황폐화 때문에 초강대국에서 지역강대국으로 전략했다.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결코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고, 그로인해 군비경쟁 압력은 러시아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 러시아의 힘이 이렇게 약화되자 전체 유라시아 대륙이 서방 정부와 기업에 개방되면서 새로운 불안정성이 창출됐다.

러시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존재는 독일이었다. 보리스 카갈리츠키는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미국에, 경제적으로 독일에 의존하게 됐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정치

적 의제를 지배한 반면, 독일은 서서히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자 해외 투자의 원천이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 사이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면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전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2003년 이라크에 대한 미국 침공 때였다. 러시아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체첸의 독립 운동에 대한 군사적 공격 명분을 주기 때문에 즐거워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라크에 막대한 돈을 빌려준 채권국이기도 했고, 당시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데 일정한 공감을 하며 미국을 경계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러시아에는 ‘친미파’와 ‘친독 일파’로 지배엘리트들이 갈려져 있다.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즉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을 강화할 것”이라는 네오콘들의 교과서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내용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과 구 소련 소속이었던 CIS(독립국가연합)들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는 북핵문제, 이란 핵문제,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공조를 과시해왔다. 그러나 냉전 이후 석유패권을 위해 중동 지역이 새로운 제국주의 지도에서 결정적이고 전략적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제국주의 국가간 경

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중동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있고, 서쪽에는 유럽, 북쪽에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북동쪽으로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나아가 중국과 연결돼 있다.

특히 카스피해 주변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송관이 지나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불안정해졌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수송관 주변 국가들을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야 했다. 그루지야는 카스피해 원유의 지중해 수출용 송유관이 지나가는 요충지다.

러시아는 미국의 폴란드와의 MD기지 협정에 맞서 그루지야의 주요 석유수출항을 봉쇄하고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유럽연합(EU) 국가 원유 소비량의 4분의 1, 천연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다.

중동패권 전략에 영향을 미치다

따라서 그루지야 침공은 제국주의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국가간 충돌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즉 미국의 석유 패권 정책에 대한 불안정과 도전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예전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강력한 친미동맹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틈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외교관은 “복구된 이라크야말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체할 단 하나뿐인 단단하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대안이다. 그것은 말을 갈아타는 것 정도가 아니다. 다가올 미국의 이라크 정권 교체는 전략적 필연이다”라고 뚜렷한 목적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그루지야 사건에서 미국은 쇠락한 힘을 보여줬다. 미국은 친미적 그루지야가 러시아에게 공습당했어



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라크 전쟁으로 발목이 묶여 있는 것 뿐 아니라 이란과 러시아와 가까워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하기 3일 전, 미국은 이란이 핵활동 동결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 논의를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유럽연합 등과 전화회담을 곧 할 예정이었다.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 후, 미국의 ‘충견’ 이스라엘이 그루지야에 군사지원을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자 러시아는 보복으로 그동안 억제했던 시리아, 이란 등 아랍권에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루지야의 무기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러시아를 달래는데 진땀을 빼고 있다.

앞으로 나토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최강대국 미국의 쇠락한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강대국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강대국이다. 미국은 이런 지역강대국을 제어하기 위해 쓸 카드가 별로 없다.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야기한 군사대립

또한 그루지야 침공 사건은 최근 세

계경제가 신용 위기에 빠지면서 경쟁 압력은 결국 정치적 차원, 즉 국가들간 문제로 질적인 상승함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최근 10년간 8% 내외의 고성장을 했다. 러시아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가 백 10명, 미국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최상위 계층 10%와 최하위 계층 10%간의 소득격차는 전국적으로 16.8배, 모스크바는 41배나 차이날 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 한 달에 2백 10달러이하의 극빈층이 5백만명에 이르고 50%는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자원산업과 수입에 의지해 제대로 된 국내 생산시설, 사회간접시설 등이 없다. 그래서 최근 석유 및 가스 가격이 하락하자 러시아 경제는 심하게 비틀거렸다. 따라서 그루지야 주변의 카스피해 문제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사용은 그루지야가 친서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불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금 우리는 미소 강대국의 냉전시대를 넘어 여전히 패권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지역열강들의 다툼으로 더 불안해진 21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